

공식행사
라운드테이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회복력 도시 (Resilience City)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함께해 주신 세계 도시와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인권옹호자 여러분,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입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포괄적인 과제가 바로 ‘빈곤과 불평등’입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1번은 “빈곤의 종식”으로, 2030년까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의 종식**과 함께 나라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교육, 의료, 환경 등의 격차를 줄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 빈곤 문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국가와 도시들이 더 많은 책임과 이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불평등을 진단할 때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2000년 이래 세계 빈곤율은 낮아졌고, 소득 불평등도 국가 간과 국가 내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가능발전을 해치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화로 인해 새로운 빈곤과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56.2%는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인류의 3분의 2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도시의 경제·사회 규모를 증가시켜 많은 일자리를 촉발시키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도 보여주었지만 도시의 집중은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생활·교통 인프라의 감소-경제·사회적 격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져**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같은 **도시 간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도시 내부에서는 노동·정치·사회적 양극화와 1인가구·은둔가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한편,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교통·환경문제들도 새로운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기후위기는 빈곤과 불평등을 공격할 때 더욱더 강해집니다.** 작년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가 “인권도시와 기후정의”였고, 저는 작년 발표에서 “기후위기에 맞서는 인권도시의 철학은 기후정의이며, 기후위기를 단순히 재난 대응이라는 도구적 관점이 아닌, 기후위기가 불러온 위험으로부터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도시들의 공동의 이행 노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이, 재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지 않으며, 이것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극명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사회적 약자의 공간입니다.

셋째, 빈곤을 종식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포괄적 성장은 기존의 물질 중심 성장에서 탈피하여 경제·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의료·교육 등의 격차를 줄여나가 생활 수준을 확장시켜나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UNDP, EU와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괄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포괄적 성장 전략과 의미를 같이하는 포용 사회 도약을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복지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에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추진하였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IT경제 전환과 벤처 산업을 성장의 한 축으로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아동의 보육을 복지로 연결시켰으며, 국가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동수당과·온종일 돌봄 체계를 도입시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혁신적 포용 성장 전략과 함께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도시의 구체적인 포괄적 성장 전략으로,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는 인권 도시의 해법으로, ‘회복력 도시’를 제안합니다. 회복력 도시는 현재의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환경적 충격들을 유연하게 흡수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또한 회복력 도시는 **고통과 용기** 두 가지 모두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고 발전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광주는 지난 2018년의 역사상 최고의 폭염,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던 최악의 가뭄, 지난 2020년과 올해, 유래 없던 최악의 폭우까지 일상화된 기후위기의 고통을 겪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이겨냈던, 고통과 용기를 경험한 도시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회복력 도시’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사람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광주

다음 통합 돌봄'을, 지역산업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신경제 지도'를, 도시공간과 기후회복을 위해 '걷고 싶은 길, 광주 RE1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돌봄 민주국가를 실현시키는 광주다움 통합 돌봄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자라나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하며, 돌봄은 사람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고, 시민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특히, 80년 5월 철저히 고립됐던 광주는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았기에 민주적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광주 정신의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고, 광주에서 시작한 돌봄의 모델은 이미 돌봄 민주국가의 모델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 돌봄’은 기존의 복지기준선과 선별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① **보편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② **돌봄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돌봄 서비스가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③ **돌봄의 신청 창구를 ‘돌봄콜’로 단일화하여 누구나 이용이 간편합니다.**
- ④ **의무 방문을 제도화하여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합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4월 1일에 시작되었고, 시행 5개월 만인 8월 말 기준 6,000명 이상의 광주시민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시민들과 국내 도시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등이 주최하는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본선에 진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신경제지도’로 경제·산업의 지형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산업과 가전산업 등 특정 산업에 제조업이 편중되어 있고, 지역의 제조업 환경도 저부가가치 위주의 산업이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1인 가구와 자영업 비율도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 경제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변동폭이 커져 왔었습니다. 지역을 주도해 나갈 미래전략산업과 새로운 창업 기회가 필요했고, 기존 제조업을 비롯한 기존산업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으며,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주도산업,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 새로운 활력 기회’를 목표로 출발한 것이 “광주신경제지도” 구상이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 유일 AI데이터 센터 개관을 올해 앞두고 있고, ‘100만 평 미래차 국가산단’과 ‘미래 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유치해

AI-미래모빌리티를 양 날개로 미래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창업의 기회를 위해 5천억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실증기반을 조성하는 등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하여 기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골목상권 진흥센터’를 통해 ‘온라인 커머스’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사람과 보행이 최우선인 도시로, 기후회복 도시를 위해 ‘걷고 싶은 길, 광주RE100’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계 많은 도시들은 이미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하고 있으며, 사람과 보행·대중교통 중심의 길을 만들어 가는 일은 기후회복과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광주는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적응, 신재생에너지 RE100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길, 광주 RE100’은 신재생에너지(RE)100을 뛰어넘어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RE, 즉 회복의 RE100을 뜻하며, 길의 회복, 도시의 회복, 기후 위기 회복이라는 3가지 큰 방향성에 맞게 ‘100개의 길과 공간’을 목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 ① ‘걷고 머무르고 싶은 길’을 통해 보행 중심의 길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 ②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를 통해 다양한 교통체계가 도입될 것입니다.
- ③ ‘기후회복과 에너지 길’을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인권 도시는 모든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고, 기회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받는 도시입니다.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는 인권도시는 공동체와 도시의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자들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약속과 실질적인 이행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가한 국제기구와 도시, 세계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회복력 도시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연대와 이행 방안 논의를 제안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